월요광장

먼 길을 나선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송 광 룡
시인·문학들 발행인

지난 9월 1일부터 3일간 제주에 다녀왔다. 각 지역에서 출판과 문화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첫날 행사가 열린 제주 한라도서관 로비에는 이들이 펴낸 단행본과 잡지들이 전시되었다. 전주의 '모악', '흐름', 고창의 '기역/나무늘보', 청주의 '직지', 하동의 '상추쌈', 진주의 '펄북스', 부산의 '해성' '산지니', 대구의 '한티재', 제주의 '각' 등등. "하, 생각보다 넓고 깊구나!" 지역이 아니고서는 만들기 어려운 책들을 살피자니, 지역 출판사가 사라지면 지역의 콘텐츠도 사라진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출판을 해 온 것은 아닐까. 지역의 속사정을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저자와 콘텐츠, 발간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여러 국면을 지나치게 살얼음 걷듯 해 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엄살과 너스레로 회피해 온 것은 아닌지 자괴감도 들었다.

어쨌거나 그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25개사 60여 명이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를 결성했다. 이 단체가 해 나갈 사업은 이날 발표한 '제주선언문'에 집약돼 있다. 내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국지역도서전'을 열자는 것, 순수 민간의 힘으로 '대한민국 지역출판대상'을 제정하자는 것, 그리고 지역문화잡지들의 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유통하는 '지역문화콘텐츠전'을 열자는 것이다.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출판·문화잡지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여 지역의 출판과 문화를 적극 살려 보자는 취지였다.

'한국지역도서전'이나 '대한민국 지역출판대상' 등의 구상은 일본 돗토리현의 지역도서전 '북 인 돗토리'(bookin-tottori)의 영향이 컸다. 일본 출판물의 80%는 도쿄에서 발행된다. 나머지 20%가 도쿄 외의 전국 43개 현과 홋카이도, 교토부, 오사카부에서 발행된다. 지역 출판사의 여건이 좋을 리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일본에서 가장 작은 돗토리현에서 어떻게 해마다 지역도서전을 개최해 올해로 30회를 맞았을까.

'지역도서전의 지속가능성 요인 연구'(김정명·최낙진 '한국출판학연구' 제74호)에 따르면, 1972년 11월 돗토리현 이마이 서점 100주년을 기념하는 좌담회에서 시민도서관을 만들고 지역출판물을 키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이마이 서점은 시민도서관을 만들자는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돗토리현 출판문화상 협찬과 마을만들기 운동에 협력하게 된다. "가장 아래에 있는 돗토리현이 바뀌는 것이 일본 전체가 바뀌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83년에는 독서추진운동과 마을 살리기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돗토리현립 독서주간 연락협의회'를 발족한다. 해마다 열리는 일본의 독서주간(10월 27일~11월 9일)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987년 돗토리현 서점조합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으로 '북인 돗토리 87 일본의 출판문화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북 인 돗토리'의 힘은 저자에서 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돗토리현민의 '독자(讀者)운동'에서 나온다. 풀어쓰자면 민간이 주최가 된 폭넓은 책읽기 운동이 원동력인 셈이다. 여기에 마을도서관을 만들고 지역출판을 활성화하는 일들이 병행된다. 일본의 지역과 지역, 사람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 지역을 복권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이들에게는 "정보는 중앙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중앙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서로 흐른다는 확고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 돗토리현 현립도서관의 책 구입비가 연간 1억 엔 이상으로 일본 내 상위 5위 안에 들고, 1인당 도서구입비가 전국 평균 21엔보다 훨씬 높은 171엔인 것은 이러한 운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돗토리현의 지역도서전이 한두 해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순수한 민간예산, 돗토리현민의 독서의식 진작과 도서관 활성화, 철저한 공정성, 일본 각 지역의 사회적 합의, 출판사·저자·언론의 공감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의 갈 길이 참으로 멀다는 생각이 든다. 이튿날 4·3평화공원을 둘러보고 1층 커피숍에 앉아 있으려니, 4·3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눈에 띄었다. '4·3과 제주 역사', '4·3으로 떠난 땅, 4·3으로 되밟다',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등등. 거개가 제주에 뿌리를 둔 지역출판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주섬주섬 펴내 온 책들이었다. 모든 것이 여실했다, 개체 없는 전체란 있을 수 없기에. 거기, 먼 길을 나선 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사실의 힘

하 선 화
광주지방법원 판사

어느 판사님이 자신이 재판 중인 민사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흘린 문구다. "사실은 힘이 있잖아." 귀에 꽂힌다. 사실의 힘이라니….

처음 들어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미 판결문에 여러 차례 썼던 말이다. '~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 내지 경험칙에 반한다.'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당신 말은 (힘이 없어서)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후로 '사실의 힘'이 말을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겼다. 이건 변론주의, 입증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내 민사재판의 무기이다. 마음도 편해진다. 사실을 말하는 자 승소하리라.

사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사실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설득력과 신빙성을 획득한다.

어느 원고였던 이가 발끈한다. "난 법정에서 사실만 말했는데도 졌다"고요. 그럴 수 있다.

판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남의 일에 함부로 개입할 권한도 없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에 근거하여 주장의 당부를 따질 뿐이다. 만일 원고가 사실을 말하였어도 필요한 사실을 누락했거나 증거를 갖출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나마 덜 억울할 일이다.

사실이 주관적이라는 데에 더 큰 함정이 있다. 흔히들 말하지 않는가, 사실은 진실과 다르다고. 그럼에도 때때로 원고와 피고 모두 스스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믿어버린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의 사실은 제3자인 판사가 법정 또는 사무실에서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에 재정립하는 사실이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판사가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지만, 사실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실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사소송은 사실을 말하는 당사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우선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누군가를, 그것도 재판장을 현혹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한 가지 거짓말을 하려거든 열 가지 거짓말을 준비해야 한다. 재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거짓 문서를 만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많은 주장이 오고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래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에는 재판을 계속한다.

때때로 사실은 그리 쉽게 발견되거나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대체로 어느 한 편에 더 가까운 채 양쪽 그 사이 어디메쯤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장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과거 사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파악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끝내 판결은 나온다.

재판을 앞둔 당사자에게 정직하게 재판에 임하라고는 못하겠다.(성실하게는 임해야 한다) 소송도 전략이 필요한 만큼 막연히 사실과 정직을 내세워 이겨보겠다는 생각은 순진하다. 게다가 민사재판은 진실한 사실을 가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해석과 법적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재판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사실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면 고맙겠다. 아래 조문이 내 마음을 진정시키듯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한번쯤 나누고 싶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기 고

혁신과 창조 꽃피울 환경 만들자

김 재 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

추석명절 연휴동안 고향 들녘을 거닐었다. 폭염 속에서도 논밭에는 알찬 결실을 맺고 있었다. 가뭄이 있었지만 그래도 풍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8, 9월이면 여지없이 찾아오던 태풍의 빈도가 최근 몇 년 동안 왜 줄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기후변화의 탓일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사회 등 새로운 변화의 파도 앞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과 창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화의 변곡점에서 혁신과 창조는 새로운 문명과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백년동안 100대 기업이 생존한 기업은 10개 정도라고 한다. 변화의 부침 속에서 혁신과 창조를 게을리하면 많은 대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반대로 새로운 대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창조적 파괴의 결과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고용절벽 앞에 서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공동체도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부족한 일자리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이 어려움을 개인 혼자서 극복하라고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과 지역과 정부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치 그리고 협력의 기반 위에서 꽃이 핀다.

민선 6기 우리 시의 시정 비전과 목표도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도시와 미래산업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모델, 청년창업도시, 마을공동체(재생), 공유문화도시,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동체에 가치를 둔 정책을 추진하고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모두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혁신과 창조가 있어야 한다. 혁신과 창조는 개인과 조직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하는 네트워크 문화에서 꽃을 피운다. 따라서 공직사회도 이러한 환경에 맞게 기존의 수직적 구조를 창의적 수평적 구조로 점차 변화해 가야 한다.

과거 관료사회의 지시와 명령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는 급속도로 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삶의 질적 고도화가 우선순위이다. 그동안 많은 물리적 시설과 하드웨어를 건설하고 확충했다면 이제 이러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 더욱 깊은 과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기존의 정책을 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고쳐 쓰고 개선하는 혁신이 신규 사업보다 더 중요한 시대이다.

때문에 혁신은 일하는 방법에서 나온다. 칸막이를 버리고 협업하는 방법이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든, 또한 플랫폼 조직으로 바꾸든 이 모든 일들이 방법을 혁신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과 창조를 위한 환경 즉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방식을 기준 삼아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존 방식으로 일할 경우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결국 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이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럼 혁신과 창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혁신과 창조의 노력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평가방법도 있어야 한다. 둘째 혁신과 창조의 성과를 너무 빨리 요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혁신과 창조는 민원처리업무가 아니다. 조급한 성과를 요구하는 순간 혁신과 창조는 자라다 만다. 셋째 공부하고 연구하며 토론하는 학습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식과 창조는 밖에 있는 전문가로부터 빌린다는 자세에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혁신과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발전했으며, 그 혜택 또한 모두가 누릴 수 있었다. 광주공동체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든 청년이든 시민활동가든 전통시장의 상인이든 혁신가와 창조자들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칸막이에서 벗어나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社 說

추석 민심, 민생 해결과 정권교체로 모아졌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이제 고향에서 명절 연휴를 보낸 이들은 훈훈한 가족의 정을 듬뿍 안고 다시 각자의 삶터로 돌아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를 찾아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예견했던 대로 민생 현장에서는 먹고 사는 걱정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유독 올해는 폭염이 심해 과일 품질이 떨어지고 바다에서는 고수온 때문에 전복과 양식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터에 태풍이 몰고 온 폭우까지 겹쳐 농어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보내야 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둔 쌀 농가들도 시름은 매한가지다. 풍년이 들어도 쌀값은 제자리를 맴돌기 일쑤여서 이구동성으로 농자잿값과 대출금을 갚고 나면 농민 손에는 쥐꼬리만 남는다는 하소연이다. 따라서 정치권에 바라는 추석 민심은 민생 해결이 많았다.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적인 난국 타개를 위해 야당의 중심인 지역정치권의 주도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야권이 새로운 국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주는 한편 심각한 호남 소외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추석 민심을 잘 살펴 우선 속개되는 정기국회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애로를 보듬어 주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등 예민한 정치 일정이 있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정치권은 호남 주축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다수당인 국민의당은 심기일전해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달라는 민심에 적극 부응하기 바란다.

최강 지진에도 야간자율학습 강행했다니

추석을 앞두고 지난 12일 밤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지진은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진이었다.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

하지만 지진 발생 당시 시민들은 대처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했고 정부의 대응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늘 늑장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국민안전처는 이번에도 지진 발생 후 한참 지나서야 알림문자를 발송했다. 더욱이 지진 행동 요령을 찾아볼 수 있는 안전처 홈페이지는 지진 발생 후 1시간가량 먹통이 됐다. 이러고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라 할 수 있을지 한심하기만 하다.

안전처의 지진 대응 매뉴얼은 "각 기관이나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재량껏 대응하라"고 돼 있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첫 지진 당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학교의 학생들에게 귀가 조치를 지시한 교육청은 거의 없었다.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흔들리는데도 감독하던 교사들은 "별거 아니니 공부나 하라"며 학생들을 교실에 머물게 했다. 만약 두 번째 지진이 건물을 파괴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뻔했다. "아무리 입시가 중요하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SNS에 글을 올린 학생들도,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라고 지적한 학부형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의 지진대응책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기존에 만들었던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때 대처방법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無 等 鼓

금표(禁標)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아이들 방으로 연기가 들어와요." (내가 사는) 아파트 출입구에 붙은 문구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 괴롭습니다." 광주시 북구 연제동 어느 상가 건물 외벽에 붙은 문구다.

담배 피울 곳이 줄어들면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들이다.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니 거리나 건물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밖으로 내몰린 흡연자들로서는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매일 당하는 일이라 참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마다 담뱃값을 올리고, 흡연금지구역을 늘리고,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노력 대비 효과는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증가해 2013년 기준 7조10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사실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는 '금지'라는 일방적 통제는 효과가 없음이 역사적 사례에서도 입증돼 왔다. 조선시대에는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나 경고를 나타낸 표지를 금표(禁標)라고 했다. 금지 내용이 잘 보이도록 1.5m 크기의 비석으로 세웠다. 백성이 필요에 의해 마을 단위에서 세운 금표는 효과가 있었지만 조정에서 세운 금표는 무용지물이었다.

연산군은 사냥을 위해 도성 외곽 사방 100리에 민간인 통제구역을 설정했다. 그 경계에 통행금지 비석을 세우고, 이를 어기는 자는 목을 베었다. 엄벌에도 불구하고 금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경제는 파탄 지경이라 도둑떼들이 창궐했는데, 이들은 금표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아예 금표 지역에 거주하기까지 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도 마찬가지. 대책 없이 성매매만을 금지하다 보니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성매매를 증식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중시설의 금연구역은 계속 늘리되, 거리 등에 적정 수의 흡연부스(공간)를 설치해 흡연권과 혐연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